

2019 서울시 9급 사회 기출문제 해설(A형)

- 이패스고시학원, 종로공무원경찰학원 박정섭 -

<총평>

같은 날 치러진 지방직 시험의 사회 과목에 비하면, 계산형 문제가 전혀 없고 모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유형이어서 체감 난이도는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 성실히 공부한 응시자라면 1회독에서 모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의 패턴대로 나왔으므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보았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환율 문제의 경우 3개의 화폐가 등장하고 환율 변동의 방향과 원인을 복합적으로 출제하여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나 평소 연습한대로 단계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역시 무난히 해결했을 것이다. 그밖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서울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직에 비교하여 법과 정치에서 2문항이 적고(8문항) 경제와 사회문화에서 1문항씩 더 많이 출제되었다. 법과 정치 부문에서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 상속, 개헌 절차, 선거구제, 양당제와 다당제, 정치참여집단, 국민참여재판, 사회계약론이, 경제 부문에서는 과세제도, GDP의 한계점, 경제체제, 환율, 가격탄력성과 판매수입, 실업률이, 그리고 사회문화에서는 자료수집방법, 근대화 이론,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 관료제이론, 문화의 속성, 사회보장제도가 출제되었다.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 20문항 모두 Box형 보기 자료가 제시되어 얼핏 보면 어려울 것 같으나 형식이 그러할 뿐 항상 강조되는 지문들에 대한 진위 판단에 다른 아니므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서울시 사회 과목의 문제도 충분히 정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 이론의 충분한 이해가 밑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보기>의 (가)~(라)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 (가)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 (나)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 (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 (라)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 ① (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 ② (나)와 (다)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 ③ (다)는 (라)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 ④ (나)와 (라)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 ②

(가)는 문헌연구법, (나)는 면접법, (다)는 참여관찰법, (라)는 질문지법이다.

- ①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 ②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질문지법이다.

- ③ 질문지법은 정형화된 질문에 의한 것이나, 면접법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 ④ 면접법은 말이라는 언어, 질문지법은 문자라는 언어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2.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사회 과학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회학자 갑(甲)은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며, 근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다. ㉡갑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 주도된 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1970년대 한 국에도 유입되어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①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 ② ㉡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 ③ ㉡은 ㉠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 ④ ㉠은 ㉡과 달리 각 국가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④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며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종속이론이며, 이는 서구 선진국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 ① 근대화 이론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 ② 종속이론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중심부 국가의 착취로 본다. 즉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 ③ 종속이론은 중심부의 간섭과 착취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 ④ 근대화 이론은 각 국가가 일정한 경로(서구의 발전단계)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3. <보기>는 질문 ㉠, ㉡에 따라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보기>		
	A	B
㉠	예	아니오
㉡	아니오	예

- ①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될 수 있다.
- ②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은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 ③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은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
- ④ ㉡이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경제적 유인체계를 강조한다.

[정답] ③

- ①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나 계획 경제 체제 모두에 공통된다.
- ②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 경제이므로 A에 계획 경제 체제가 들어가야 한다.

- ③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계획 경제 체제이므로 타당하다.
- ④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이므로 B가 시장 경제 체제이므로 B가 A보다 경제적 유인체계를 강조한다.

4. <보기>의 ㉠과 ㉡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 ㉡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 ① ㉠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는 ㉠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 ③ ㉠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④ ㉡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정답] ①

(가)는 간접 민주정치 방식, (나)는 직접 민주정치 방식이다.

- ① 직접 민주정치 방식이나 간접 민주정치 방식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 ② 정책결정의 정당성은 국민의 참여 폭이 큰 직접 민주정치방식에서 증진될 수 있다.
- ③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간접 민주정치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 ④ 간접 민주정치 방식의 한계인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정치 방식을 도입한다.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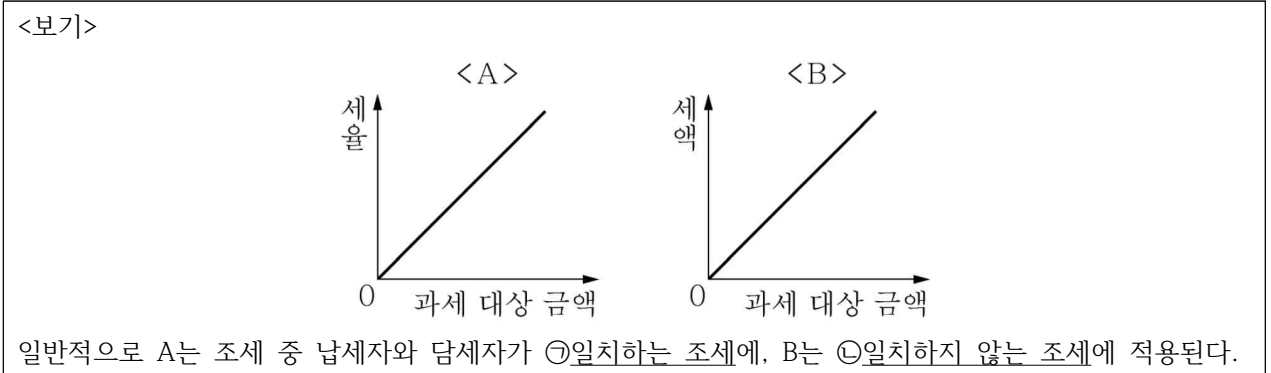
갑(甲)과 을(乙)은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丙)이 홀로 키우던 자녀 A와 B 중에서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A를 키우던 중 갑과 을은 불화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인 A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였다. 1년 뒤, 갑은 교통사고로 3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①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 ②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원이다.
- ③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 ④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정답] ③

- ①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친양자인 A가 갑이 남긴 3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모두 상속한다.
- ③ 병의 자녀 가운데 A는 갑의 친양자가 되어 병을 상속하지 못하고, B가 상속한다.
- ④ 친양자인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된다.

6. <보기>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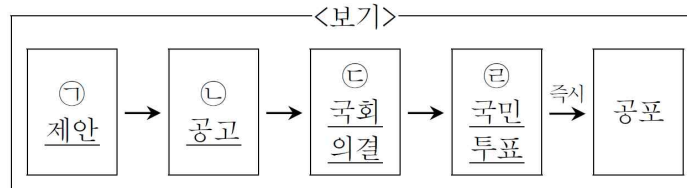
- ① B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②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 ③ ㉠은 ㉡에 비해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 ④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④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이다. 그리고 ㉠은 직접세, ㉡은 간접세이다.

- ① 비례세는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②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s)란 정부가 재량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경기진폭을 줄여주는 기능을 말한다. 누진세나 고용보험 등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가 좋으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세수가 줄고, 고용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기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③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조세저항의 정도가 커 조세 징수 비용도 크다.
-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고 누진세를 주로 택하는 직접세에서 더 크다.

7. <보기>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 ㉠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한다.
- ③ ㉢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은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정답] ④

- ①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②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타당하다.

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①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국내 총생산은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
- ③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 ④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②

- 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활동의 결과들은 계산되지 않는다.
- ②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합(또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서 생산물이란 재화와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 ③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분배의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④ 타당하다. 예를 들어, 공해나 질병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여가생활이 반영되지 않는다.

9.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올림픽은 전세계 모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 ②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 ④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정답] ①

제시문은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체계이고, 사회 구성요소들은 모두 사회유지에 적합한 기능을 하며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기능론의 관점에 가깝다.

- ①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 ②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나 교환이론이다.

- ③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 ④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10.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 기업 경영 혁신 보고서

○○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 ①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 ②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 ③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④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 ③

㉠은 관료제, ㉡은 탈관료제이다.

- ① 탈관료제는 수평적 조직에 가까워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작아진다.
- ② 관료제는 조직의 영속성이 있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 ③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제이다.
- ④ 관료제는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탈관료제는 업적과 능력을 중시한다.

11.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매달 A군은 1만엔을, B군은 100달러를 구입한다. ㉠원/엔 환율 변동과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A군과 B군이 각각 엔화와 달러화를 구입하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하였다.

구분	변동 전	변동 후
A군	9만원	10만원
B군	11만원	10만원

- ① 엔화의 수요 감소는 ㉠의 요인이다.
- ②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 ③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 ④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

A군이 1만엔을 구입하는 비용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엔화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이며 원/엔 환율은 상승한다.

B군이 100달러를 구입하는 비용이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달러화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 ① 엔화의 수요 감소로 원/엔 환율은 하락한다.
- ② 달러화의 공급 감소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 ③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대일상품의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상품 수지가 개선된다.
- ④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이 감소된다.

12. <보기 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구분	A	B
내용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

<보기 2>

- ㄱ.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 ㄴ. 일반적으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 ㄷ. B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 ㄹ. 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A는 소선거구제, B는 중.대선거구제이다.

ㄱ(○) 중.대선거구제에서 군소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이다.

ㄷ(○) 소선거구제에서 거대정당만이 의석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서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ㄹ(×) 선거구가 작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13. <보기>의 자료는 갑(甲)국의 t기와 t+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기>		
구분	t기	t+1기
A당	40%	60%
B당	32%	37%
C당	25%	2%
기타	3%	1%

* 두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임.

- ① t기에 비해 t+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것이다.
- ② t+1기와 달리 t기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 ③ t기에 비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 ④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답] ④

t기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고, t+1기는 A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황이다. 그런데 갑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은 A당 소속인 점에 유의한다.

- ① t기에 비해 t+1기에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자 여당인 A당의 횡포가 증가할 것이다.
- ② 만일 의원내각제라면 t기는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것이고, t+1기는 A당만으로도 단독 정부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갑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의회의 의석 분포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여당으로서 정부를 구성한다.
- ③ 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④ t기는 여소야대이므로 여대야소인 t+1기에 비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14.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내용	A	B	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예	예	아니오
(가)	예	예	예

-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 ③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 ④ (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④

정치적 책임을 지는 A가 정당, B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나머지 C가 이익 집단이다.

- ①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한다. 그리고 정당, 시민단체, 이익 집단 모두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시민단체와 정당, 이익 집단 모두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 ③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 ④ 정당, 시민단체, 이익 집단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5.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보일러를 독점 생산하는 K기업은 보일러 가격 10%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K기업의 사원 A~D가 예상한 보일러의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수입 변화율을 나타낸다.				
구분	A	B	C	D
판매수입 변화율(%)	10	-10	5	0

- ①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본다.
- ②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③ C는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 ④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정답] ①

A는 수요곡선이 수직인 완전비탄력적인 경우로 가격 상승률과 판매수입 증가율이 동일하다. B는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탄력적인 경우이다. C는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수입이 증가하는 비탄력적인 경우이다. D는 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판매수입이 일정한 단위탄력적인 경우이다.

- ①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로 타당하다.
- ② 비탄력적인 경우에도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 ③ 비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 값이 0과 1 사이로서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크다.
- ④ 단위탄력적인 경우이다.

16.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김치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은 매콤한 김치에 흰쌀밥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김치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

- ①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 ②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 ③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 ④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정답] ②

제시문은 문화의 속성 가운데 공유성의 사례로서, 공유성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행동양식과 행위기준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성 때문에 개인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 ①은 문화의 변동성, ③은 축적성, ④는 전체성(총체성)을 말한다.

17. <보기>의 ㉠, ㉡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보기>

㉠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갑(甲)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 직장을 다니던 을(乙)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① 전체 인구			
③ 만 15세 미만 인구	② 노동 가능 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④ 비경제활동 인구	⑤ 경제활동 인구	
		⑥ 취업자	⑦ 실업자

* 실업률 $\frac{⑦}{⑤} \times 100$

* 취업률 $\frac{⑥}{⑤} \times 100$

* 고용률 $\frac{⑥}{②} \times 100$

* 경제활동참가율 $\frac{⑤}{②} \times 100$

- ① ㉠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② ㉡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③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다.
 ④ 경제활동참가율은 ㉠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지만, ㉡의 경우 이전보다 하락한다.

[정답] ②

③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예: 학생)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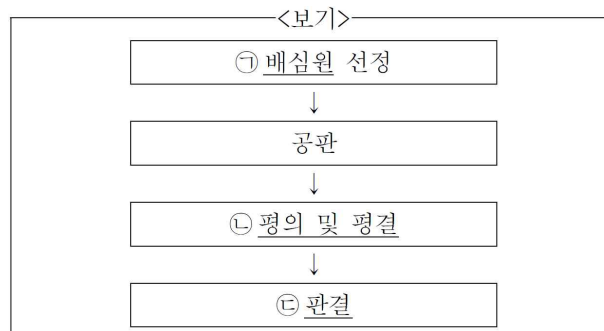
①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었으므로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② 취업자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면 경제활동인구가 1명 줄고 실업자는 동일하므로 실업률은 높아진다. 노동가능인구가 동일한 상황에서 취업자 1명이 없어졌으므로 취업률은 하락한다.

③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다.

④ 취업자가 실업자로 변해도 경제활동인구는 동일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동일하다. 그러나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18.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③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정답]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의 문제이다.

- ① 1심의 판결에 불복하면 보통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② 배심원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오히려 동법 제18조는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약을 두고 있다.
- ③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6조 제5항).
- ④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19.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단다. 주권자인 국민의 ㉠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 ①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 ②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 ③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 ④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제시문은 루소의 견해이다.

- ① ㉠에는 ‘일반의지’가 적절하다. 루소는 국가란 개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 계약에 따라 성립된 공적 인격(人格)의 의사를 일반 의지라고 하였다. 일반의지에 근거하여 각 개인은 완전히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루소(1712~1778)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1787~1799)에 영향을 주었다.
- ③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 것은 홉스이다.
- ④ 사회계약론은 공통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20.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특징 \ 제도		A	B	C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아니오	예	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 ①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③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③

A는 사회 서비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B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C는 공공부조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 ②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가 아니라 재산, 소득 등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③ 타당하다.
- ④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